

2017

Report

of Trend

2017

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

규제완화 정책

동향보고

2017. 10. part1 제 83 호

Contents

I . 정부 추진동향

1. 참여정부 못 다 이룬 국가균형발전 재점화...특별법 개정안 발의 3
2. 규제프리존법 , 모두 손질해야 4
3. 정권 잡은 뒤 바뀌는 靑...테러방지법처럼 규제프리존법 입장 바꿀까 5
4. 낡은 지역정책 폐기 ... 지역특성 반영 균형발전 정책돼야 6

II . 비수도권 (지역) 추진동향

1. 이해찬 의원 , " 신규지정된 공공기관 330 개 지방이전 해야 " 7

1. 참여정부 못 다 이룬 국가균형발전 재점화...특별법 개정안 발의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7.10.01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국제신문

02

주요내용

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(경남 김해을·사진) 의원은 1 일 “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법적 요건 강화를 위해 ‘국가균형발전특별법’ (균특법) 개정안을 발의

- 균특법은 2004 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방분권 핵심 정책
-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(경남 김해을·사진) 의원
 - 국토의 11.8% 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%, 매출 상위 1000 대 기업의 81% 가 집중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
 -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램
- 김 의원이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
 -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을 ‘지역발전’ 에서 ‘국가균형발전’ 으로 바꾸는 게 핵심
 - 개정안은 이를 위해 ‘지역발전위원회’ 의 명칭을 참여정부 시절 ‘국가균형발전위원회’ 로 복원해 역할과 위상을 강화
 -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회계, 계획의 명칭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,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했음
 - 시·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, 시·도 발전 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
 - 시·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「계획계약 제도」 도입 방안
 - 정부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도 강제
 -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 의결에 따라 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고, 정부는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, 인허가 지원 등

시사점

지역정책 방향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,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서 진일보한 정책들의 모색 필요

출처

<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2008250> <http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100&key=20171002.22002000264>

2. 규제프리존법, 모두 손질해야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7.10.1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서울경제

02

주요내용

■ **내년도 정부의 슈퍼예산을 관리·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, 규제 개혁 등 각종 경제 이슈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**

- **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**
 - 야당이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「규제프리존법」은 특별법 하나로 무려 67 개의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
 - 이름과 내용 모두 새롭게 손봐야 한다고 밝혀 기존 법안 대신 여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완 입법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
- **박 의원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: 규제프리존법**
 - 자체 분석한 결과 법안의 60% 는 절충 가능하지만 나머지 40% 는 도저히 원안 그대로의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
 -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까지 무력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
 - 국민 안전과 환경 규제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
- **기존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여당 차원의 새로운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서**
 -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
 -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규제 완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“의료 영리화 부분만 제외한다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” 고 밝혀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음
- **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**
 -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
 -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3 배가량 벌어지는 현실에서는 소비 위축, 소상공인·자영업자 고통 증가,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음
 -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
 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착취 구조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임
- **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해서**
 -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·여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
 - 젊은이들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통한 기술 보호와 금융 지원 등을 뒷받침할 계획
 -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

시사점

규제프리존법의 목적이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문제점 보완 필요

출처

<http://www.sedaily.com/NewsView/10M90PWE3L>

3. 정권 잡은 뒤 바뀌는 靑...테러방지법처럼 규제프리존법 입장 바꿀까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7.10.12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앙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정권이 바뀌면서 '규제프리존특별법' 의 운명도 바뀌게 될까

- 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·도에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 (free zone) 을 만들어 각 지역별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목적
 - 2015년 12월 규제프리존 설치를 공식화한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반대
 -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“규제프리존법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” 이라거나 “대통령이 나서서 비선실세 (최순실) 를 위해 만든 법” (손혜원 의원) 이라고 강하게 비판
 -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
- 하지만 막상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잇따라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
 - 전남도지사 때부터 찬성하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겠다고 함
 -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난 7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
- 규제프리존법은 새 운명을 맞게 될 상황
 -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면
 -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“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다” 며 ‘규제 샌드박스’ 를 도입하겠다고 공언
- 규제 프리존이 특정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인 반면 규제 샌드박스 (Sand box) 는 사업 프로젝트 단위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
 - 모래 위에서 자유롭게 놀게 해주는 샌드박스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규제완화의 수준은 규제 프리존보다 규제 샌드박스가 더 높다는 평가
- 청와대로선 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만큼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
-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함
 -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본지와 통화
 -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
 - 규제 샌드박스과 규제 프리존을 포함해서 법안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살펴보고 있음

시사점

규제프리존법, 규제 샌드박스 등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정책 추진되어야 하며, 일부 수도권에서 제기하는 수도권에도의 적용은 배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출처

<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2005934>

4. 낡은 지역정책 폐기 ... 지역특성 반영 균형발전 정책대야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7.10.13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앙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**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기존의 낡은 지역정책을 폐기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**

-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관한 「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및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광주·전남 토론회」
-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와 지원체계 개편, 혁신도시 중심의 신 지역성장 거점 구축, 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제·개정, 지역 고유 정신문화와 지역가치 발굴·선양에 관한 내용 등이 논의
- **송재호 지역발전위 위원장**
 -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수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를 회복해야 함
 - 과거 지역정책의 낡은 것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
- **박병호 행정부시장**
 -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규모와 낙후도등 여러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선행돼야 함
 -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법 개정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기대
- **류한호 광주대 교수**
 - 지역 간 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경제·문화적 격차 해소가 우선돼야 함
 -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
- **나주몽 전남대 교수**
 -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낡은 지역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
- **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**
 -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균형정책과 추진체계가 달라져왔음
 -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·도 중심의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함

시사점

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최우선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

출처

<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2008250>

1. 이해찬 의원, "신규지정된 공공기관 330 개 지방이전 해야 "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7.10.1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앙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

- 이해찬 (더불어민주당, 세종특별자치시) 의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
- 국가균형발전법 제 18 조
 -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이전제의 대상을 정하고 있음
-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「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」을 수립
 -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시행
 - 2016년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 (이전율 92.8%),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
-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
 - 200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 (서울시 117개, 인천시 7개, 경기도 28개)
 - 이 중 6개 기관만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
 -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 (근무원인 약 58천명)
 - 시행령 제 16조 7호에 따라 「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」에 따라 이전제외기관이 늘어날 수 있음
- 이해찬 의원
 -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
 - 참여정부 때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음 정부로 지속, 발전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
 -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함

시사점

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라는 점에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속적인 추진 필요

출처

<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1999587>